

# 한국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시행과 제도화: 운영 평가에 따른 성과와 과제

정철자(한국의국어대학교)

유한내(전남대학교)

## 1. 서론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 시행하며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장복희, 2017, p. 503).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인정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3년에는 연간 18,8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법무부, 2025. 2. 3.). 1994년 국내 난민 심사가 시작된 이후 2024년까지의 국적별 신청자 통계를 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가 상위 5개국으로 나타난다(법무부, 2025. 1. 16.). 이 중 중국어를 제외한 언어는 국내 화자 수가 극히 적어, 해당 언어의 전문 통 번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더욱이 신청자의 국적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언어 지원 수요도 점점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심사 절차의 다단계 구조를 고려할 때, 실제 난민통역<sup>1)</sup> 수요는 공식적인 난민 신청 건수를 초과하

1)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도 명칭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 따라 편의상 ‘난민통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이 표현은 통역 대상자의 법적 지위나 통역 수

는 경향이 있다.

난민 심사에서 신청인의 구술 진술은 주요 증거로 채택되는 핵심 절차이므로, 통역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난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Pöllabauer, 2015, p. 203). 그러나 통역 오류, 통역인의 자질 부족, 제도적 관리 부재 등과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이지은, 2012; 이향, 2022; Lee, 2014; Lee & Choi, 2015),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난민 면접 조작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7년 중반, 난민인권센터를 방문한 이집트, 수단, 모로코, 리비아 등 아랍어권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면접 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난민인권센터, 2024. 2. 5.). 조사 결과, 다수의 조서에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허위로 난민을 신청했으며,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진술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신청인들은 ‘경제적 목적의 신청’이라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통보받았다(김연주, 2020, p. 228). 이후 시민단체의 추가 조사에서는 피해자들의 조서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통역인 서명도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특정 통역인과 공무원이 관련 조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난민인권센터, 2019, p. 3).

이 사건을 계기로 통역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무부는 2020년 난민 심사 제도 내에 ‘난민통역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2021년에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를 도입하였다(난민인권센터, 2024. 3. 6., p. 22). 이 인증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가배상 판결 이후 제기된 행정 책임성 강화 요구에 대한 제도적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난민 심사에서 통역의 품질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쳐 일정 기

---

행 맥락을 엄밀히 구분한 개념적 정의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을 따르는 것임을 밝혀둔다. 실제 통역은 대부분 난민 심사 절차에 있는 신청자(asylum seekers)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 연구에서는 ‘망명 절차 통역(interpreting in the asylum setting)’이라는 용어가 보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된다(Bergunde & Pöllabauer, 2019; UNHCR, 2010).

준 이상의 통역 역량을 갖춘 자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정의되며, 법무부 난민정책과가 주관하고 통 번역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된다 (법무부, 2024). 이 제도는 크게 선별시험, 맞춤형 교육, 인증시험으로 구성되며, 통역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평가를 통해 품질 관리를 도모한다. 이는 단지 전문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 사회로 이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공정한 행정 절차 운영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인증제의 구체적 운영 절차, 구성 요소 간 연계성, 언어별 수급 구조와 같은 실질적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의 한국 난민제도 관련 연구는 주로 법제도 및 정책 틀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국제 비교를 통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 왔으며(권한용, 2016; 김원건과 오종진, 2022; 최원근과 권재범, 2023), 난민 심사 과정에서 통역이 수행하는 구체적 기능과 그 제도적 보장을 조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이지은, 2012; Lee, 2014).

본 연구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운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선별시험, 맞춤형 교육, 인증시험, 보수교육, 위촉으로 이어지는 운영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다. 특히 교육 및 시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 결과가 실제 통역 인력 운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증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공공성, 전문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국내 법정통역 자격제도 및 해외 공공 통번역 인증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의 상대적 위치와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탐색한다.

기존의 법제도 중심 난민정책 연구들이 법령 체계, 국제협약 수용 여부, 정책 담론 분석에 집중해 온 반면, 본 연구는 난민 심사의 실제 수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통역인력의 제도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교육, 시험, 위촉에 이르는 실제 운영 절차와 정책적 연계 구조를 중심으로 통역 품질관리의 제도화 수준을 평가한 시도는 통번역학, 행정학, 인권 연구 간 학제적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 한국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도입 배경과 제도적 구조는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2) 인증제의 운영은 실제로 난민 심사 통역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3) 한국 인증제의 제도적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제도화 개념과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 2. 선행 연구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란 특정한 활동이나 절차가 사회적 합의와 규범을 통해 안정된 규칙 체계로 정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Scott, 2013, p. 48). 이 과정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은 관련 활동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해당 행위가 반복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신력과 정당성 또한 확보하게 된다(Scott, 2013, pp. 50-58). 통번역 분야에서도 이러한 제도화는 자격 부여, 업무 기준, 평가 체계 등을 포함하는 구조적 장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통번역 활동이 단순한 행정 보조를 넘어서 권리 보장과 절차적 정의 실현의 핵심 요소로 기능함을 보여준다(정철자와 유한내, 2020).

특히 제도화의 핵심 기제로서 ‘인증’(certification)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의(KSA ISO/IEC Guide 2)에 따르면, “평가 대상이 적용되는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평가하거나 제3자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로 설명된다(박지영, 2016, p. 35). 이러한 인증은 단순한 자격 부여 절차를 넘어, 특정 활동의 품질, 전문성,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신뢰 가능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특히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자격 인증은 제도 전반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며, 이 점에서 인증은 제도화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된다(Petrocheilou, 2025, p. 6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도화 수준을 (1) 법령 또는 공식 규정의 존재, (2) 표준화된 절차(교육-평가-자격 부여) 구축 여부, (3) 사후 품질 관리 체

계 유무, (4) 사회적 정당성과 이용자 신뢰 확보 정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척도에 따라 한국 난민통역 인증제도의 제도화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한편, 법정통역이나 난민통역과 같은 공공서비스 통역 분야에서의 인증 제도는 단순한 시험 통과 여부를 넘어서야 한다. 인증은 통번역사의 실질적인 언어 역량과 현장 적합성을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이는 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 이용자 신뢰 구축, 나아가 행정 절차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공공서비스 통역 분야에서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인증 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한국 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위한 유용한 비교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반이 된다.

## 2.1 해외 공공서비스 통역 인증제도

난민통역의 품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각국의 난민제도와 공공서비스 통역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난민통역이 지닌 복잡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난민 절차에서 고품질 통역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한 국가는 드물다(UNHCR, 2010, p. 34). UNHCR이 2010년 유럽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난민) 통역사를 위한 교육 제공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제한적이며, 많은 경우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UNHCR, 2010, p. 33). 특히 난민 심사에서는 공식적인 통역 교육을 받지 않은 통역사가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통역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Bergunde & Pöllabauer, 2019, p. 1).

이러한 상황은 난민통역의 품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특히 난민통역이 독립된 제도 영역으로 다뤄지기보다는, 보다 넓은 공공서비스 통역 체계 내에서 포괄되거나 연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를 공공서비스 통역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비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난민통역에 특화된 인증제도보다는, 난민통역을 포함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통역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제도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난민통역이 많은 국가에서 공공서비스 통역의 하위 영역, 특히 법률 통역의 일부로 간주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 통역(public service interpreting)은 보건, 법률, 교육, 사회복지, 이민 등 공공 영역에서 제공되는 통역을 포괄하며, 난민통역은 이 중에서도 주로 법률 및 이민 통역의 하위 범주에 해당한다(Mikkelsen, 2014, pp. 13-18). 즉, 모든 공공서비스 통역사가 난민통역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통역사는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통역사의 하위 범주로 간주된다. 실제로 여러 국가는 난민통역을 별도의 자격 체계로 분리하기보다는 공공서비스 통역 제도 내에서 포괄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통역 분야의 인증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운영되는지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각국의 언어 다양성, 이민 정책, 공공 행정 체계 등의 구조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조망하고자, 공공서비스 통역 인증 및 자격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사례 선정은 국가 주도의 통역 자격제도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자격 부여 방식, 교육과정, 시험 운영, 사후 평가 시스템에 관한 비교 가능한 자료가 확보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래 <표 1>은 Petrocheilou(2025, pp. 73-76)가 정리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등 8개국의 공공서비스 통역 인증제도를 핵심 요건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다.

표 1  
해외 공공서비스 통역 인증제도<sup>2)</sup>

국가	인증 주체	주요 요건	인증 범위 및 수준	특이사항
미국	- 연방 법원 행정처 - 민간기관 (TCI 등)	- 법정: 학사, 법률 통역 교육, 시험 - 커뮤니티: 18세 이상, 고졸, 40시간 교육	법정, 커뮤니티, 의료 통역 등으로 분리	연방법 제1827조에 따라 자격 기준 명시
캐나다	CTTIC (7개 주 협회 연합)	국가 표준 시험 통과	번역, 용어, 통역 분야로 분류	인증 통역사는 공공기관에서 법적 전문가로 인정
호주	NAATI (국가 공인 인증기관)	- 시험(언어별 차등 적용) - 소수 언어는 '인정'만 가능	시니어 회의통역사 - 언어보조자까지 6단계	전국 단일 인증체계로 관리
영국	- NRPSI - 민간 교육기관	- 커뮤니티: Level 3 자격증 - NRPSI 등록: 400시간 실무 + 자격	정회원, 임시회원, 소수 언어회원으로 구분	대부분 유급 통역은 자격 요구
스위스	- INTERPRET - 연방 교육청	INTERPRET 교육 + 연방 자격 시험	난민, 교육, 의료 등 분야별 분류	상위 자격은 복잡한 상황 대응 능력 포함
노르웨이	IMDi (정부 산하 통역사 등록청)	5단계 등급의 등록 통역사 제도	공공기관 통역 전용, 자격별 활동 제한	2022년부터 공공기관 통역 법적 의무화
독일	각 주 정부 (연방 기준 시험 적용)	법률 지식, 일반번역, 구술, 논술 등 시험	선서 통역사로 주정부에 등록	일부 주는 타주 인증 결과 인정
오스트리아	중앙 정부	학위 또는 교육(240/60 ECTS), 실무 경력, 시험 통과	선서 및 법정 인증 통역사로 DB 등록	소수 언어는 필기시험 면제 가능 (유효기간 5년)

이들 주요 국가의 공공서비스 통역 인증제도는 다양한 행정 구조와 언어 정책을 반영하면서도 몇 가지 공통된 제도적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제도화의 범위와 통합성 측면에서, 다수의 국가는 공공서비스 통역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NAATI, 스위스의 INTERPRET, 노르웨이의 IMDi는 인증 요건, 시험 운영,

2) ‘공공서비스 통역 인증제도’라는 용어는 국가에 따라 의료, 법률, 교육 등 분야별 인증제도와 중첩되거나, 보다 상위 또는 하위 범주의 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법정통역 관련 해외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정철자와 유한내(2020, p. 297)를 참고할 수 있다.

등급 분류, 보수교육 및 갱신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역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법적 지위와 활용 기준의 명확화도 특징적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법정 통역 분야에서 선서통역사 제도를 통해 통역사의 법적 자격과 행정기관 활용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공공기관 통역에 등록 통역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통역사의 법적 위상 정립과 자격 활용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셋째, 소수 언어 대응을 위한 유연한 구조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 호주는 ‘인정(recognition)’ 제도를 통해 소수 언어 통역 인력을 제도 내로 수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시험 일부를 면제한 조건부 인증을 운영한다. 이는 언어 다양성과 수요 변동성이 큰 공공서비스 통역 영역의 특성에 대응하는 제도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사후 품질관리 및 지속적 역량 강화 체계를 제도화한 점도 주요 특징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인증 이후에도 보수교육, 인증 갱신, 경력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역사의 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관련 학위제도와 연계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통역은 전반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분야로 분류되며, 특히 망명 절차와 같이 긴급하고 비정형적인 상황에서는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Williamson, 2024, p. 1). 실제로 일부 국가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심사 과정에서 자격 보유 여부를 통역사 배정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Bergunde & Pöllabauer, 2019, p. 1). 또한 정철자와 유한내(2020, p. 298)에 따르면, 유럽 및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는 자격시험 없이 통번역 대학원 등의 장기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인증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기관이 실질적인 인증 기능을 수행하며, 자격 검정보다는 교육 이수 자체가 전문가 자격 부여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요 언어권 통번역 인력 양성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수 언어의 경우에는 교육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품질 확보에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난민통역 정책을 비교 분석할 때에는 공식적인 인증 제도만을

중심으로 보기보다, 각국의 교육제도 운영 방식과 그 실효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난민통역 관련 교육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2 해외 난민통역 교육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공공서비스 통역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권장 수준에 그치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증을 취득한 통역사가 우선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난민 심사에 참여하는 통역사에게 자격 보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는 드물다. 이처럼 인증제만으로는 통역의 품질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병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통역 교육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단체, 자선단체, 고등교육기관, 정부 간 기구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하는 맞춤형, 단기형, 현장지향적 교육 프로그램은 제도화가 미흡한 국가들에서 통역 품질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베르군데와 펠라바우어(Bergunde & Pöllabauer, 2019, p. 8)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래 <표 2>는 이들이 제시한 주요 국가의 난민통역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주체, 주요 요건, 인증 범위 및 특이사항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해외 난민통역 관련 교육 프로그램

국가	인증 주체	주요 요건	인증 범위 및 수준	특이사항
국제	UNHCR	자가학습 모듈, 난민통역 가이드북, 언어별 워크숍	윤리 및 기초이론 중심, NGO 협력	자가 학습 자료 전 세계 공개
스위스	inZone (제네바대학교 부설)	온라인/혼합형 교육, 난민캠프 특화 과정	분쟁지역 통역 역량, 저연결 환경 대응	ICRC 등과 협력, 플랫폼 직접 개발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대 + UNHCR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지역사회 기반, 장기 프로그램	2002년 시작, 아랍권 대상

미국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3일 집중 법률통역 교육	지역사회 법률통역 중심, 이론+실습	미국 유일 지역사회 법률통역 교육
미국/캐나다	- Voice of Love - MCIS	트라우마 민감 통역 교육 (웹세미나/워크숍)	트라우마 상황 대응, 정서 윤리 교육 포함	현재 캐나다 MCIS 인수, Healing Voices로 재출시 예정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해외의 난민통역 교육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대학, NGO,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가 학습 모듈부터 워크숍, 집중형 실무 교육, 트라우마 대응 훈련에 이르기까지 교육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다. 특히 inZone(스위스)이나 Cross-Cultural Communications(미국) 같은 프로그램은 난민 커뮤니티나 분쟁 지역이라는 특수한 현장 맥락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존의 국가 인증 제도 바깥에서 통역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UNHCR과 Voice of Love의 교육은 윤리, 심리, 정서적 대응 등 언어 외적 요소까지 포함함으로써, 통역의 역할을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인도주의적 실천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이나 인증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도, 영국(UK Home Office, 2021), 캐나다(Healthcare Interpretation Network, 2007), 일본(특정비영리활동법인 나고야난민지원실, 2020) 등은 난민통역사 지침서를 통해 최소한의 품질 기준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제도화 이전 단계에서 실무 통역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기초적 실행 수단으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교육 프로그램 및 실무 지침에 기반한 접근은 인증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역사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특히 자격 검정이 미비하거나 소수 언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서는, 이러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교육 모델이 인증제도와 병행되어야 할 필수 기반 장치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는 한국의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역시 단회성 시험 중심 구조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교육 훈련 체계와의 제도적 연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제도화 과정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정책적 의의와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도화 이론과 인증 개념을 이론적 분석 틀로 설정하고, 국내외 제도 비교와 실증 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증 분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위탁 사업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19, 2021, 2022, 2023, 2024). 여기에 더해 법무부 공고문, 제도 안내 자료, 관련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제도 구조, 운영 체계, 법적 기반 등을 정리하고, 인증제의 실효성과 운영 경향을 도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2차 자료에 기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통역사, 난민 신청자, 면접관 등의 실제 경험과 현장 평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뷰, 설문조사 등 질적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통역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 4.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제도화 과정과 운영 평가

### 4.1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도입 배경과 역사

대한민국에서 난민통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초기에는 인증제보다는 위촉 중심의 통역사 운영 체계를 주를 이루었다. 2012년, 법무부는 난민 심사 절차에서의 통역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총 18개 언어, 71명의 난민 전문 통역인을 공식 위촉하였다(법무부, 2012). 이후 2015년에는 언어 범위를 23개로 확대하고, 총 222명의 통역인을 위촉하면서 규모를 크게 확장하였다(이한석,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위촉은 별도의 통역 실기시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역인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법무부는 통역사의 공적 책임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9년에는 러시아어, 아랍어 등 주요 언어권에 대해 전문임기제 공무원 자격으로 난민통역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였고(법무부, 2019), 같은 해에는 법무부 난민과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난민통역 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자격 평가 기반의 선발 체계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21년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도입으로 제도화되었다. 해당 인증제는 10주간의 온라인 교육 및 평가 과정을 포함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통역 인력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체계로 정착되었다. 이는 기존의 위촉 중심 운영 방식에서 교육 및 검정 기반의 자격 체계로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된다(난민인권센터, 2024. 2. 5.).

#### 4.2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운영 개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난민 심사의 통역 품질을 향상시키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법무부는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과 인증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 통역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무부, 2024). 「난민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난민전문통역인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2022년부터 법무부는 인증시험을 통과한 인원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위촉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법무부, 2024). 난민전문통역인은 전국 단위의 인재풀(pool) 형태로 관리되며, 실제 난민 심사 시 우선적으로 통역 업무에 배정된다. 현재 인증제 운영은 법무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 담당하고 있다(법무부, 2024).

이러한 제도는 아래와 같은 연간 절차를 통해 운영된다.

표 3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운영 절차

순서	과정	시기	내용
1	모집공고	5~6월	법무부 공고, 이메일 신청.
2	선별시험 (온라인)	6~7월	언어별 듣기 말하기 능력 평가
3	맞춤형 교육 (온라인)	8~9월	선별시험 결과 상 중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통역 기법, 윤리, 법률 지식 등 교육
4	인증시험 (오프라인)	10월	필기시험(윤리, 법률, 배경지식) + 구술시험(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
5	보수교육 (온라인)	12월	온라인 간담회 형식. 통역인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현장 의견 청취
6	위촉	다음 해 1월	인증시험 합격자를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

#### 4.2.1 모집공고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매년 5~6월경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공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한국어와 외국어 간 통번역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의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난민법」 상 통역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법무부, 2024). 신청은 이메일 접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언어권별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선발이 진행된다.

#### 4.2.2 선별시험

선별시험은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운영의 첫 단계로, 통역 희망자의 언어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 과정의 수준별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 시험은 단순한 자격 판별을 넘어, 맞춤형 교육 설계와 향후 인증시험 준비도를 사전에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험은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시자는 난민 관련 뉴스 동영상을 1분 정도 시청한 뒤 그 내용을 요약 전달하고, 평가자의 추가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청해력, 핵심 정보 파악 능력, 요약 및 전달력 등 실질적인 언어 수행 능력이 종합적으로 측정된다.

평가위원은 언어별 전문가 2인 1조로 구성되며, 소수 언어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시험 결과는 상 중 하의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교육 참여 여부 및 수준별 교육과정 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4.2.3 맞춤형 교육

맞춤형 교육은 선별시험을 통해 상급 및 중급 등급으로 분류된 응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부 소수 언어에 한해서는 하급 등급자에게도 예외적으로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은 상급과 중급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상급은 하나의 그룹, 중급은 그룹당 약 100명 규모로 두 개의 그룹으로 편성된다.

교육 다음 표와 같이 8주간 주 1회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강의와 사전 제작된 동영상 강의가 병행된다. 실시간 강의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초 이론 과목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자율 학습 형태로 제공된다. 모든 실시간 수업은 녹화되어 학습자가 복습할 수 있도록 공유된다.

표 4  
난민전문통역인 맞춤형 교육 내용

주차	기초이론 (동영상 자율학습)	한국어 숙달 (온라인 실시간 강의 1시간)	통역 실기 (온라인 실시간 강의 1시간 30분)
1	난민통역 개론	전문용어 및 간접/직접화법 등	인종 1
2	난민통역 능력과 용어	전문용어 및 문법, 발음 등	인종 2
3	통역과 커뮤니케이션	난민 면접 시 사용 어휘 및 표현 학습	종교 1
4	통역과 문화	난민 관련 뉴스, 다큐 활용 어휘, 문법 학습	종교 2
5	통역인의 역할	유의어 및 공공언어의 특징, 뉴스 활용 어휘 학습	특정 집단 1
6	통역 윤리강령	유의어 및 난민 관련 공공언어 사례	특정 집단 2

7	국내외 난민법	유의어 및 난민 관련 뉴스 활용 어휘, 발음 학습	정치적 의견 1
8	난민통역 기본업무	유의어 및 난민 관련 뉴스 활용 어휘, 발음 학습	정치적 의견 2

과정은 ‘난민전문통역 기초 이론’과 ‘난민전문통역 실기’의 두 과목으로 구성된다. 기초 이론 과목은 모든 교육생이 수강해야 하며, 난민법, 통역 윤리, 법률 용어, 통번역 이론 등을 포함한다. 실기 과목은 대화 통역, 순차 통역, 시역 등 실제 난민 심사 상황을 반영한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다. 통역 교육 내용은 난민법상 난민의 정의에 명시된 박해 사유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법무부, 2013). 이에 따라 실제 난민 심사 면접의 질문은 대체로 인종, 종교, 특정 사회집단, 정치적 의견이라는 네 가지 핵심 범주에 따라 구성되며, 통역인 교육 또한 이러한 구조에 맞춰 주제를 분류하여 설계된다. 난민전문통역 실기 교재 또한 이 네 가지 주제별 범주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상급 등급자의 경우, 실시간 실기 수업과 과제 수행이 병행되며, 중급 등급자는 실시간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부 교육생은 실시간 수업 외에도 동영상 강의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학습자의 수준과 필요에 맞춘 유연한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인증시험 대비와 현장 적응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강사진은 통번역 교육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론과 실무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 그룹에는 다양한 언어 사용자가 포함되므로,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된다. 언어별 개별 통역 피드백 제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본적인 통역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하며, 한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 4.2.4 인증시험

인증시험은 난민전문통역인으로서의 기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험은 신청받은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sup>3)</sup> 대화 통역, 순차 통역, 시역, 배경지식 및 통역윤리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일정한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화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난민전문통역 1급, 2급, 3급의 세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별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1급, 70점 이상은 2급, 60점 이상은 3급으로 인증되며, 60점 미만은 인증 불가로 처리된다. 각 영역의 배점은 대화 통역 30점, 순차 통역 30점, 시역 30점, 배경지식 및 윤리 10점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내용의 충실성, 도착어의 유창성, 전달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시험은 사전에 응시 대상자에게 이메일과 사전 설명회를 통해 안내되며, 전국 주요 권역별 거점 대학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된다. 응시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녹음된 시험 문제를 청취하고 통역을 수행하며, 각 영역은 신호음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응시자의 통역 내용은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어 평가에 활용된다.

실기 영역은 실제 난민 심사 환경을 반영하여 구성되며, 대화 통역은 신청자와 심사관의 발화를 상호 통역하는 방식, 순차 통역은 발화 내용을 청취한 후 일정 시간 내에 한국어로 통역하는 방식, 시역은 한국어 텍스트를 보고 외국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경지식 및 윤리 문항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각각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응시자의 통역 맥락 이해력과 윤리적 판단 능력을 함께 평가한다.

시험 출제는 난민정책과의 실무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주제와 난이도, 문제 유형 등을 설계하며, 복수 문항을 개발한 후 법무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문제 구성의 형평성과 통역 상황의 재현 가능성, 언어

3) 2024년의 경우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우즈벱어, 아랍어, 프랑스어, 벵골어, 싱할라어, 태국어, 라오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네팔어, 미얀마어, 우르두어, 일본어, 카자흐어, 튀르키예어, 키르기스어, 캄보디아어, 광둥어, 말레이어, 스와힐리어, 아제르바이잔어, 암하라어, 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지크어, 트위어, 편자브어, 티그리아어 등 36개 언어가 신청되었다.

별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인증시험 문제 출제 및 평가위원은 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개설된 언어학과 인력을 활용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각 언어당 2인의 평가위원이 선정된다. 다만, 국내에서 평가위원 확보가 어려운 암하라어, 아제르바이잔어, 벵골어, 캄보디아어, 힌디어, 키르기스어, 페르시아어, 편자브어, 싱할라어, 타밀어, 태국어, 튀르키예어, 우르두어 등의 경우, 한국어 평가자 1인 외에 해외 평가자 2인이 추가로 선정되어 평가가 진행된다.

시험은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등 주요 권역별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언어별 조 편성과 시간 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모든 시험은 복수 평가자가 채점한 결과를 평균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는 향후 위촉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다음 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지원자 및 인증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21, 2022, 2023, 2024).

표 5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지원자 및 인증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증제 지원자	379명	520명	442명	506명
선별시험 응시자	287명	412명	352명	407명
교육생	356명	346명	278명	328명
인증시험 응시자	195명	191명	175명	202명
인증자	160명	148명	110명	147명

#### 4.2.5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단기 교육과 인증시험 이후 난민전문통역인의 실무 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8주간의 기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통역인의 역할 이해, 윤리 기준 확립, 통역 기법 향상 등을 중심으로 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교육은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난민통역인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강의, 통역 기법 개선 방안, 실무 경험 공유 등이 포함된다. 외부 전문가로는 난민인권센터 소속 변호사가 참여하여 실제 난민 보호 현장에서의 시각을 공유하고, 기존 통역인들과의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성찰을 유도한다.

보수교육에는 신규 인증자뿐만 아니라 활동 중인 기존 통역인들도 함께 참여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참가자들은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역의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실무 적용 가능성이 높은 교육 환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보수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통역인의 실무 대응 능력과 직업적 정체성,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신규 인증자의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이 된다.

#### 4.2.6 위촉

인증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에게는 법무부 장관 명의로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이 이루어진다. 위촉된 통역인은 난민전문통역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이 구분되며, 일정 기간 동안 난민심사 통역 업무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난민전문통역 1급은 통역 업무 전반에 있어 별도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난민전문통역 2급은 대화 통역 분야에 한해 활용이 가능하며, 순차 통역 및 시역 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교육 이수가 권장된다. 난민전문통역 3급은 통역 품질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제한적 활용이 권장되며,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 숙련도 제고 및 집중 통역 교육 이수가 권장된다.

다음 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인증시험 결과에 따른 등급별 인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21, 2022, 2023, 2024).

**표 6**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시험 등급별 인원 분포

인증 등급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난민전문통역 1급	97명 (49.7%)	60명 (31.4%)	26명 (15%)	55명 (27.2%)
난민전문통역 2급	44명 (22.6%)	47명 (24.6%)	40명 (23%)	44명 (21.8%)
난민전문통역 3급	19명 (9.7%)	41명 (21.5%)	44명 (25%)	48명 (23.8%)
총계	160명	148명	110명	147명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으로 인증제가 시행되며, 총 43개 언어에서 763명의 시험 응시자가 확인되었고, 이 중 565명이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 중 1급은 238명, 2급은 175명, 3급은 152명이었으며, 일부 인원은 재인증을 통해 중복 포함된 경우도 있다.

법무부(2025)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34개 언어, 총 414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는 36개 언어, 총 393명이 난민통역을 담당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인증제 운영의 지속성과 언어권별 수요 반영을 통해, 통역 인력 양성과 활용 체계가 점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 인증 비율과 등급 분포는 통역 품질 관리 기준의 안정성과 인증제의 실효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 4.3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제도적 성과와 개선 과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2021년 공식 도입 이후 4년간의 운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제도적 정착을 이루어냈다. 특히 제도 도입 이전까지 위촉 중심으로 운영되던 난민통역 체계에서, 사전 선발-교육-시험-위촉이라는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통역 품질 관리의 구조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인증제가 난민통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통역사의 책임성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행정적 근거를 구축하였다.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인증제를 통한 위촉 기준이 명문화되었고, 선별시험과 맞춤형 교육, 인증시험, 보수교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체계적 운영은 기존의 비공식 비정형 통역

관행에서 한걸음 진전된 제도화를 실현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난민통역인 안내서(2021), 난민통역 길라잡이(2022), 원활한 통역을 위한 난민심사관 지침서(2023), 원활한 통역을 위한 난민통역인 지침서(2024) 등을 발간하며, 실무 활용과 품질 기준 정립을 위한 자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1, 2022, 2023, 2024).

둘째, 운영 성과 측면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3개 언어에서 총 763명의 응시자가 인증시험에 참여하였고, 그중 565명이 인증을 획득하였다. 특히 다양한 언어권의 통역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실제 난민 심사에서의 통역 수요 대응력이 향상되었다. 인증 비율과 등급 분포의 변화는 제도의 엄정성과 선별력 유지 속에서 인력풀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교육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단기 교육, 보수교육, 실기 중심의 인증시험 등을 통해 통역인의 실무 능력과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강의 주제 구성과 외부 전문가 참여, 실기 중심 시험 체계는 난민 통역이라는 특수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비전문가 중심 통역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만 제도적 한계도 확인된다. 첫째, 인증시험의 단회성 평가에 따른 통역 역량 진단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현재는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 평가도 병행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통역 상황에서의 수행력을 평가하거나,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의 체계성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인증이 통역 배정과 활용의 실질적 기준으로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해외 사례에서처럼 인증 통역사만을 공공기관 통역 업무에 배정하거나, 인증이 법적 요건으로 명시된 경우에 비해, 한국의 경우 실제 통역 배치 과정에서 인증 여부가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국제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인증제는 국가 전체의 공공서비스 통역 체계를 포괄하는 범국가적 제도보다는 특정 영

역 중심의 제한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과 같은 사례에서는 인증제와 교육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며, 통역사의 전문성과 제도적 책임성이 함께 관리된다. 반면 한국의 인증제는 인증과 교육을 결합하여 단기 교육-시험 체계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도 전반의 완결성과 체계성에서는 한계를 지닌다. 다만, 인증 없이 단기 교육만 제공하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비교적 제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통역 품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제도와 연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통번역 관련 학위과정 또는 공인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규 교육 이수 후 인증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인증제 교육을 학점 이수로 인정하는 등 상호 보완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는 장기적 역량 개발과 통역사 경력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통번역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증제의 공정성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평가 기준, 교육 기회, 언어별 형평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소수 언어 통역인 확보 및 소수 언어권 지원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는 향후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중심으로, 난민통역의 제도화 과정과 운영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난민통역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통번역학 내에서 주변적이고 ‘회색 지대(grey zone)’로 간주되어 왔으며(Pöllabauer, 2006; Bancroft et al., 2013), 제도적 기반 또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18년 난민심사 조작 사건이 폭로되면서, 통역 품질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2021년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난민통역을 임시 위촉 중심에서 교육 및 평가 기반의 공식 자

격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증제는 짧은 기간 동안 40개 이상의 언어에서 통역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시험을 통해 인증함으로써, 소수 언어 통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단기 교육과 인증시험을 연계한 구조는, 대법원이 시행하는 단일 시험 기반의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제도(대법원, 2024)나,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운영하는 장기 교육과 인증시험이 결합된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4)과 비교할 때, 양자의 요소를 절충한 중간 형태로서 제도적 진전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 운영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향후 통합적 공공 통번역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통역사의 전문성과 통역 품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인증을 넘어서 실질적인 활용 기준과 제도적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인증을 받은 통역사들이 실무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교육 이수 여부가 통역사 채용의 주요 기준이 되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Bergunde와 Pöllabauer(2019, p. 16)의 지적처럼, 교육이 통역 품질의 핵심 지표로 인식되고, 교육받은 통역사가 실제 업무에서 우대될 때, 통역사들은 자신의 교육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동기를 얻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운영 주체의 정치적 의지와 통역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난민통역 정책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개선할 지점이 많지만, 제도화 초기 단계에서 인증제와 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예산의 제약, 언어 다양성, 통역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제도적 실험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통역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다변화, 인증 이후의 실무 연계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난민통역은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난민의 권리 보장과 인간 존엄의 실현에 기여하는 공공적 실천이다. 따라서 통역사 양성과 제도 운영은 ‘언어’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한 ‘정의와 신뢰의 구축’이

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 권한용. (2016).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10(1), 213-249.
- 김연주. (2020). ‘난민면접 조작 (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공익과 인권*, 20, 225-266.
- 김원건, 오종진. (2022). 한국과 터키의 난민수용 비교연구: 중견국 외교를 중심으로. *EU 연구*, 63, 339-374.
- 난민인권센터. (2019. 6. 18.).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https://nancen.org/1948>
- 난민인권센터. (2024. 2. 5.). 난민통역을 중심으로 본 사법통역제도 현황 메모. <https://nancen.org/2393>
- 난민인권센터. (2024. 3. 6.).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 <https://nancen.org/2396>
- 대법원. (2024. 10. 9.).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실시 계획* 공고. 대법원.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453&gubun=3>
- 박지영. (2016). 국내 통번역 자격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번역학연구*, 17(3), 33-59.
- 법무부. (2012. 5. 23.). 난민을 위한 통역지원체계 구축. 법무부.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626176>
- 법무부. (2013). *난민법* [법률 제11776호, 2013. 3. 22.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376>
- 법무부. (2019. 1. 22.). 2019년도 법무부 전문임기제(난민심사 및 난민통역) 다급 채용 제공고문.

- <https://www.moj.go.kr/moj/22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0JTJGNDg3NDY5JTJGYXJ0Y2xWaWV3LmRvJTNG>  
법무부. (2024. 6. 28.).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참가자 모집 공고.
-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13/584752/artclView.do>  
법무부. (2025. 1. 16.). 법무부, 제4회 난민전문통역인 147명 신규 위촉. 대한  
민국 정책브리핑.
-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0599>  
법무부. (2025. 2. 3.).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보  
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14/591571/artclView.do>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1). 난민통역인 안내서 [미간행 업무자  
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2). 난민통역 길라잡이 [미간행 교육자  
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3). 원활한 통역을 위한 난민심사관 지  
침서 [미간행 실무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4). 원활한 통역을 위한 난민통역인 지  
침서 [미간행 실무자료].
- 이지은. (2012). 난민재판 통역의 질에 대한 고찰: 통역인의 역할에 관한 사  
례연구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1), 213-236.
- 이한석. (2015. 12. 18). 난민전문 통역인 140명 신규 위촉...총 222명으로 늘  
어. SBS 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21310](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21310)
- 이향. (2022). 난민통역의 쟁점들. 번역학연구, 23(2), 9-28.
- 장복희. (2017). 동아시아의 난민법정책. 저스티스, 158(2), 503-527.
- 정철자, 유한내. (2020). 법정통번역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 방안 연구. 번역  
학연구, 21(2), 285-309.
- 최원근, 권재범. (2023). 난민정책과 공여국 내 난민 ODA 연구: 이탈리아 및  
캐나다 사례와 한국 난민정책에 대한 함의. 국제개발협력연구, 15(2),  
1-19.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나고야난민지원실. (2020). 난민 통역 매뉴얼.

<http://www.door-to-asylum.jp/>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4. 7. 8.). 2024년 제9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edu.kohi.or.kr/miae/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84&q\\_bb\\_scttSn=20240708090306271&q\\_tmplatTy=L&q\\_currPage=&q\\_clCode=&q\\_searchKeyTy=&q\\_searchVal=&](https://edu.kohi.or.kr/miae/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84&q_bb_scttSn=20240708090306271&q_tmplatTy=L&q_currPage=&q_clCode=&q_searchKeyTy=&q_searchVal=&)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19).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위탁 사업 결과보고서 [미공개 내부보고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21).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위탁 사업 결과보고서 [미공개 내부보고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22).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위탁 사업 결과보고서 [미공개 내부보고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23).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위탁 사업 결과보고서 [미공개 내부보고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24).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위탁 사업 결과보고서 [미공개 내부보고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Bancroft, M. A., Bendana, L., Bruggeman, J. & Feuerle, L. M. (2013). Interpreting in the gray zone: Where community and legal interpreting intersect. *Translation & Interpreting*, 5(1), 94-113.

Bergunde, A., & Pollabauer, S. (2019). Curricula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training course for interpreters in an asylum context. *Translation & Interpret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Research*, 11(1), 1-21.

Healthcare Interpretation Network. (2007). *National standard guide for*

- community interpreting services.*  
<https://ailia.ca/resources/Documents/National%20Standard%20Guide%20for%20Community%20Interpreting%20Services.pdf>
- Lee, J. (2014). A pressing need for the reform of interpreting service in asylum settings: A case study of asylum appeal hearings in South Korea. *Journal of Refugee Studies*, 27(1), 62-81.
- Lee, J., & Choi, M. (2015). Recommendations for interpreter training for asylum interview settings: The South Korean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preter Education*, 7(2), 39-54.
- Mikkelsen, H. (2014). Evolution of public service interpreter training in the U.S. *FITISPos International Journal*, 1(1), 9-22.
- Petrocheilou, M. (2025). Certification of interpreters: an overview and best practices internationally.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9, 63-79.
- Pöllabauer, S. (2006). "During the interview, the interpreter will provide a faithful translation." The potentials and pitfalls of researching interpreting in immigration, asylum, and police settings: methodology and research paradigms.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 5, 229-244.
- Pöllabauer, S. (2015). Interpreting in asylum proceedings. In H. M. Mikkelsen & R. Jourdenais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interpreting* (pp. 202-216), Routledge.
- Scott, W. R. (2013).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Ideas, interests, and identities*. Sage.
- UK Home Office. (2021). *Interpreters code of conduct (Version 4.0)*.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85040/Code\\_of\\_conduct\\_for\\_UK\\_visas\\_and\\_immigration\\_registered\\_interpreters\\_v4.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85040/Code_of_conduct_for_UK_visas_and_immigration_registered_interpreters_v4.pdf)
- UNHCR. (2010). *Improving asylum procedures. Comparativ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law and practice*.  
<http://www.unhcr.org/protection/operations/4ba9d99d9/improving-asylum->

[procedures-comparative-analysis-recommendations-law-practice.html](#)

Williamson, A. J. (2024). *Defining the role of the UK asylum interpreter: expectations, realities and training need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lasgow).

## **Implemen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sylum interpreter certification system in South Korea: Achievements and challenges**

**Cheolja Jeong**

Graduate School for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an-Nae Yu** (corresponding author, ambrosia14@gmail.com)

International Divis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 and operational structure of South Korea's Asylum Interpreter Certification System,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21, and evaluates its institutional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o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Although interpreting plays a critical role in safeguarding the rights of asylum seekers during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the relevant infrastructure in the country has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institutional found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urrent system has been structured, focusing on the sequential procedures — screening tests, tailored training, certification examinations, post-certification training, and appointment — and presents these procedures as a cohesive framework. In addition, it compares this model with certification and training models in other major countries to assess its relative stage of development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finds that the system has established a basic foundation for managing interpreting quality by linking training and testing. However, it still lacks institutional maturity and practical consistency when compared to broader frameworks for public service interpreting.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robust system that enhances the public interest and accessibility, professionalism, and sustainability of asylum interpretation.

**Keywords:** Institutionalization of asylum interpreting; interpreter certification system; public service interpreting;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nterpreting quality management

**키워드:** 난민통역 제도화, 통번역 인증제도, 공공서비스 통역, 난민 심사 절차, 통역 품질 관리

정철자(제1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

cheoljajeong@gmail.com

유한내(교신저자)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ambrosia14@gmail.com

논문 투고일: 2025년 5월 11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6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6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5년 6월 15일